

인구변동과 젠더의 미래

KAWS Kore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2020년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

인구변동과
젠더의 미래

2020

한국여성학회

2020년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

인구변동과 젠더의 미래

일시 2020년 11월 14일(토) 9:30~18:00

장소 코엑스 Conference Room(남) 328호 및 온라인 중계

주최 한국여성학회, 경상대학교 여성연구소

후원 한국연구재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KAWS 한국여성학회
Kore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GNU 경상대학교 여성연구소

NRF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2020년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

인구변동과 젠더의 미래

이 발표논문집은 2020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일정표

2020년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
인구변동과 젠더의 미래

시 간	순 서			
09:30-09:50	등록			
09:50-10:00	개회사 및 축사			
10:00-11:30	[라운드테이블] 여성, '인구 문제'를 문제화하다			
11:30-12:30	점심식사			
12:30-14:00	정기총회			
14:10-16:00	[기획세션1] 비혼? 혼자 살기, 같이 살기, 다르게 살기	[기획세션2] 여성 모빌리티와 장소의 재전유	[기획세션3] 가족변동과 여성의 일상	
16:00-16:10	휴식			
16:10-18:00	[기획세션4] 변화하는 가족법: 역동하는 가족과 모성경험	[기획세션5] 고령화·가족변동 시대, 돌봄의 재구성	[기획세션6] 기술과 재생산, 그리고 생명정치	[자유주제 세션]

프로그램

2020년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
인구변동과 젠더의 미래

09:30-09:50 등록

09:50-10:00 **개회사** 김경희 (한국여성학회장)

축사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라운드테이블]

여성, '인구 문제'를 문제화하다

10:00-11:30

사회: 김혜경 (전북대)

1. 저출산에 대한 정책적 담론의 탐색적 분석: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이진숙 (대구대)
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젠더 분석: 저출산 담론의 재구성을 위하여
김영미 (동서대)
3. 저출산 위기론의 페미니즘적 전유: 불편한 동거에서 발전적 결별로
백영경 (제주대)
4. 저출산 시대 다문화가족 정책의 궤적: '국제결혼'에서 '사회통합'으로?
황정미 (서울대)
5. 저출산 시대, 인권관점에서 바라본 인권정책
류민희 (희망을 만드는 법)
6.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쟁점과 과제
이은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성평등노동TF)

11:30-14:00 점심식사 및 정기총회

[기획세션1]

비혼? 혼자 살기, 같이 살기, 다르게 살기

14:10-16:00

사회: 김애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페미니스트-비혼운동을 재방문하기: 비혼 정치의 불/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발표: 정현희 (서울대)
2.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비혼/들'의 의미 이론화
발표: 유화정 (가족구성권연구소)
3. 한국 동거 동성커플의 삶과 동성혼·파트너십 욕구
발표: 이호림 (고려대 / 성소수자가족구성권보장을위한네트워크)

토론: 박수민 (연세대)

이박혜경 (인하대)

김경서 (비혼 퀴어·여성 함께/살기 반달)

[기획세션2]

여성 모빌리티와 장소의 재전유

14:10-16:00

사회: 강인화 (숙명여대)

1. 여성청년 이주민의 주체적 '장소' 만들기
발표: 장민지 (경남대)
2. 대만 여성청년들의 한국 워킹홀리데이
: '워킹'과 '홀리데이'를 넘는 새로운 이동 경험
발표: 이다은 (페미니스트연구웹진 FWD)

3. 대도시 주변부 여성결혼이민자의 이동성과 초국적 어머니-노동자 경험

발표: 위라겸 (전남여성가족재단)

토론: 고민경 (건국대)

조문영 (연세대)

황정미 (서울대)

[기획세션3]

가족변동과 여성의 일상

14:10-16:00

사회: 추지현 (서울대)

1. 여성들의 혼인행동 변화와 한국의 젠더혁명

발표: 최선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무엇이 우울한 여성을 더 우울하게 하는가?

: 청년 여성의 가족 내 성역할 규범과 우울의 관계를 중심으로

발표: 류한소·김지민·김경민 (중앙대)

3. 도시 1인 가구의 주거지 결정에 대한 젠더 차이

: 관악구 20-30대 가구의 안정성 욕구와 주거비를 중심으로

발표: 조규원 (서울대)

토론: 정고운 (경희대)

백영경 (제주대)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6:00-16:10 휴식

[기획세션4]

변화하는 가족법: 역동하는 가족과 모성 경험

16:10-18:00

사회: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 친생추정과 '자의 복리'

: 대법원 2019.10.1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발표: 김선화 (수원지방법원)

2. 국가가 보호하는 '모성'의 협소함

: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출산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이은진 (서울대)

3. 재생산권에서 입양의 복잡한 지위

: 입양특례법 논쟁과 한부모가족지원법 헌법소원을 중심으로

발표: 박상은 (충북대)

토론: 오정진 (부산대)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세션5]

고령화·가족변동 시대, 돌봄의 재구성

16:10-18:00

사회: 김수정 (동아대)

1. 페미니스트 돌봄 담론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

발표: 전희경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2. 1인가구의 가족돌봄과 자기돌봄: 돌봄 수행과 돌봄 이후의 자립을 중심으로

발표: 지은숙 (서울대)

3. 돌봄의 세대 간 재분배와 젠더관계의 미래

발표: 문현아 (서울대)

토론: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백경훈 (이화여대)

[기획세션6]

기술과 재생산, 그리고 생명정치

16:10-18:00

사회: 이현재 (서울시립대)

1. 인구관리의 생명 권력과 여성의 신체: 정상으로서 '생명'과 낙태죄를 중심으로

발표: 김은주 (서울시립대)

2. 재생산의료 영역에서의 남성: 한국의 보조생식기술과 난임 남성의 비가시화

발표: 김선혜 (이화여대)

3. 인구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다태아 출생의 증가와 신생아 건강 약화

발표: 하정옥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토론: 현남숙 (한성대)

박진희 (동국대)

[자유주제 세션]

16:10-18:00

사회: 정고운 (경희대)

1. 보육 예산 변화가 2030 여성 유권자의 투표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20대 총선을 중심으로

발표: 이산 (고려대)

2. 불륜 서사에 드러나는 시대성과 가치체계, 섹슈얼리티 연구
: 《위대한 개츠비》와 《붉은 사랑》을 넘어 《부부의 세계》까지

발표: 김혜빈 (이화여대)

3. 중국 부련(婦聯)의 기관지 『중국부녀(中國婦女)』에 나타나는 계획생육(計劃生育)
의 의미: 1950년대 후반의 논의

발표: 장수지 (연세대)

토론: 최선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남이 (서울대)

배은경 (서울대)

목 차

2020년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
인구변동과 젠더의 미래

- [라운드테이블] - 여성, '인구 문제'를 문제화하다
 - 저출산에 대한 정책적 담론의 탐색적 분석: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3
이진숙 (대구대)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젠더 분석
: 저출산 담론의 재구성을 위하여 5
김영미 (동서대)
 - 저출산 위기론의 페미니즘적 전유 7
백영경 (제주대)
 - 저출산 시대 다문화가족 정책의 궤적: '국제결혼'에서 '사회통합'으로? 9
황정미 (서울대)
 - 저출산 시대, 인권관점에서 바라본 인권정책 11
류민희 (희망을 만드는 법)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쟁점과 과제 13
이은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성평등노동TF)
- [기획세션1] - 비혼? 혼자 살기, 같이 살기, 다르게 살기
 - 페미니스트-비혼운동을 재방문하기

: 비혼 정치의 불/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17
정현희 (서울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비혼/들’의 의미 이론화	19
유화정 (가족구성권연구소)	
한국 동거 동성커플의 삶과 동성혼·파트너십 욕구	21
이호림 (고려대 / 성소수자가족구성권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 [기획세션2] - 여성 모빌리티와 장소의 재전유	
여성청년 이주민의 주체적 ‘장소’ 만들기	25
장민지 (경남대)	
대만 여성청년들의 한국 워킹홀리데이 : ‘워킹’과 ‘홀리데이’를 넘는 새로운 이동경험	27
이다은 (페미니스트연구웹진 FWD)	
대도시 주변부 여성결혼이민자의 이동성과 초국적 어머니-노동자 경험	29
위라겸 (전남여성가족재단)	
● [기획세션3] - 가족변동과 여성의 일상	
여성들의 혼인행동 변화와 한국의 젠더혁명	33
최선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무엇이 우울한 여성을 더 우울하게 하는가? : 청년 여성의 가족 내 성역할 규범과 우울의 관계를 중심으로	35
류한소·김지민·김경민 (중앙대)	

도시 1인 가구의 주거지 결정에 대한 젠더 차이
: 관악구 20-30대 가구의 안정성 욕구와 주거비를 중심으로 37
조규원 (서울대)

● [기획세션4] - 변화하는 가족법: 역동하는 가족과 모성 경험

친생추정과 ‘자의 복리’
: 대법원 2019.10.1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41
김선화 (수원지방법원)

국가가 보호하는 ‘모성’의 협소함
: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출산 사례를 중심으로 43
이은진 (서울대)

재생산권에서 입양의 복잡한 지위
: 입양특례법 논쟁과 한부모가족지원법 헌법소원을 중심으로 47
박상은 (충북대)

● [기획세션5] - 고령화·가족변동 시대, 돌봄의 재구성

페미니스트 돌봄 담론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 51
전희경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1인가구의 가족돌봄과 자기돌봄
: 돌봄 수행과 돌봄 이후의 자립을 중심으로 53
지은숙 (서울대)

돌봄의 세대 간 재분배와 젠더관계의 미래 55
문현아 (서울대)

● [기획세션6] - 기술과 재생산, 그리고 생명정치

인구관리의 생명 권력과 여성의 신체
: 정상으로서 '생명'과 낙태죄를 중심으로 59
김은주 (서울시립대)

재생산의료 영역에서의 남성
: 한국의 보조생식기술과 난임 남성의 비가시화 61
김선혜 (이화여대)

인구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다태아 출생의 증가와 신생아 건강 약화 · 63
하정옥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자유주제 세션]

보육 예산 변화가 2030 여성 유권자의 투표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20대 총선을 중심으로 67
이산 (고려대)

불륜 서사에 드러나는 시대성과 가치체계, 섹슈얼리티 연구
: 《위대한 개츠비》와 《붉은 사랑》을 넘어 《부부의 세계》까지 69
김혜빈 (이화여대)

중국 부련(婦聯)의 기관지 『중국부녀(中國婦女)』에 나타나는 계획생육(計劃生育)의
의미: 1950년대 후반의 논의 71
장수지 (연세대)

여성, ‘인구 문제’ 를 문제화하다

사회: 김혜경 (전북대)

1. 저출산에 대한 정책적 담론의 탐색적 분석: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이진숙 (대구대)
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젠더 분석: 저출산 담론의 재구성을 위하여
김영미 (동서대)
3. 저출산 위기론의 페미니즘적 전유: 불편한 동거에서 발전적 결별로
백영경 (제주대)
4. 저출산 시대 다문화가족 정책의 궤적: ‘국제결혼’에서 ‘사회통합’으로?
황정미 (서울대)
5. 저출산 시대, 인권관점에서 바라본 인권정책
류민희 (희망을 만드는 법)
6.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쟁점과 과제
이은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성평등노동TF)

저출산에 대한 정책적 담론의 탐색적 분석 : 경상북도를 중심으로¹⁾

이진숙 (대구대)

한국사회에서는 저출산현상이 국가적 위험이라는 사고가 지배적 담론으로 확산되어 있다. 저출산이 국가사회적 위험임에는 분명하지만 위기론 위주의 지배담론에 묻혀서 젠더관점을 고려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적 담론들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연구는 저출산이 심화되어 있고, 지방소멸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저출산에 대한 정책적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자료는 도의회 회의록이었으며, 분석방법은 회의록 내용을 위기론과 대안론으로 구분하고, 중심적 내용들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경상북도에서는 지금까지 주로 위기론 중심의 정책적 담론이 지배적이었으며, 젠더적 측면을 고려한 대안적 낙관론은 매우 희박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젠더적 측면을 고려한 정책적 방안들은 발달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다양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1) 이 글은 '이진숙(2019): "저출산에 대한 정책적 담론의 탐색적 분석 -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젠더와 사회』, 제30집. pp. 105-125'를 수정한 것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젠더 분석 : 저출산 담론의 재구성을 위하여¹⁾

김영미 (동서대)

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책과 저변의 위기 담론에는 인구정책 일변도의 관점, 출산율 제고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의 신체와 사적 삶에 대한 통제와 개입을 당연시하는 관점이 반영되어 있음을 젠더 분석을 통해 비판하였다. 현재 저출산 대응에서 필요한 것은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국가의 관점과 태도의 변화, 저출산 담론의 재구성이다. 저출산 대책의 일차적인 목표는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 보장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여성의 재생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인정 및 재생산 건강권의 적극적 보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재생산권을 남녀가 동등하게, 결혼지위와 무관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

1) 이 발표문은 김영미(2018) 연구내용을 학회 발표를 위해 축약 및 수정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김영미(2018),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젠더 분석”, 비판사회정책 제59호, pp. 103-152

저출산 위기론의 페미니즘적 전유 : 불편한 동거에서 발전적 결별로

백영경 (제주대)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위기론이 처음 제기된 것이 2000년대 초반의 일이니, 여성운동 역시 근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낮은 출산(생)율, 혹은 저출산을 문제시하는 정책과 씨름해 온 셈이다. 저출산 위기론 속에서 여성운동은 기본적으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출산은 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꾸준히 펼쳐왔다. 이는 일면 타당하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정책 담당자를 설득할 때나 필요할 뿐, 사회적으로는 불필요한 말일 수도 있다. 성평등은 애초에 출산율을 높인다는 과제와는 독립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목표이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생애주기 내내 경험하는 차별과 폭력을 제거하는데 저출산 위기론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며, 실제로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가져다주지도 못했다. 게다가 이제까지 정부는 저출산위기론을 이야기하면서 보통의 시민들이 실제로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개선하기보다는 출산을 국가와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성시민이 다해야 하는 의무로 규정하면서 보수적인 가족 가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는 동안 세월은 흘러서 저출산이라는 틀은 이제 그 자체로 수명을 다했다. 어떤 정책도 여성을 출산도구화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시민의 자격을 출산에 연동시키는 것에 대한 저항도 날로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행태와 관련해서 여성운동은 무엇을 해야하는가. 또 그간 저출산 위기론에 비판적으로 개입해 온 흐름은 최근 페미니즘의 흐름을 만나서 어떤 새로운 논점을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지금은 이런 문제들을 제기해야 할 시점이다.

저출산 시대 다문화가족 정책의 궤적 : ‘국제결혼’에서 ‘사회통합’으로?

황정미 (서울대)

잘 알려진 대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 지원은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일부 지자체들이 도입한 이른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경제위기와 도농 격차 확대,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서 “농촌에 끌린 아기 울음소리”를 되살리려는 동기, 즉 지역사회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이 작동한 것이다. 이후 국제결혼의 급증은 결혼을 원하는 개인들의 수요,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행위자(결혼중개업체)가 고안한 초고속 성혼관행, 그리고 결혼의 양적 증가 자체가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위로부터의 인구정책적 기대가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저출산 시대 다문화가족 정책의 궤적을 살펴본다.

저출산 시대, 인권관점에서 바라본 인권정책

류민희 (희망을 만드는 법)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형법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한국에서 임신·출산 가능성과 능력이 처벌을 비롯하여 개인의 삶에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고 온전한 권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한편 한국의 인구정책은 최근의 기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여성의 출산력만을 통제하여 국가에 ‘바람직한’ 인구결과를 조정하고자 한 떨치기 어려운 역사적 유산이 있다. 본 발표에서는 한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인구정책의 영향을 받은 독재국가의 개발주의적 인구통제의 시기를 뒤로 하고 페미니즘과 인권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인구정책의 시기로 마침내 화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짧은 고민을 나누려 한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쟁점과 과제

이은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성평등노동TF)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한 이후,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5개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추진 중임. 2020년 10월 현재 제4차 기본계획(’21-’25)을 수립 중임(12월 발표 예정).

정부가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구변동과 젠더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오늘 학술대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함. 특히, 지난 2년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저출산 로드맵(’18. 12월, 정부 합동)’을 발표하면서, 저출산 정책의 목표를 ‘성평등 구현(남녀 평등한 일터·가정)’을 제시하였던 바, 오늘의 논의는 이러한 정책 목표를 보다 구체화하고 더 좋은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 가는데 큰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됨.

본 발제는 저출산 분야와 관련한 그간의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및 쟁점사항을 점검하고, 제4차 기본계획 수립 방향(안) 등 진행 사항 등을 공유하고자 함. 젠더 관점에서 살펴본 그간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정책 지향은 여성의 몸에 대한 출산 도구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출산과 양육의 주체를 여성으로 상정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가구 내 보조적 소득자로 대우하는 등 성평등 관점의 고려가 매우 미흡했음.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이 같은 한계를 뛰어 넘는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본 토론문은 그간의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쟁점을 살펴보고, 제4차 기본계획 수립방향(안)등 현재의 진행 사항 및 고려사항 등을 공유함.

비혼?

혼자 살기, 같이 살기, 다르게 살기

사회: 김애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페미니스트-비혼운동을 재방문하기: 비혼 정치의 불/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발표: 정현희 (서울대)
2.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비혼/들'의 의미 이론화
발표: 유화정 (가족구성권연구소)
3. 한국 동거 동성커플의 삶과 동성혼·파트너십 욕구
발표: 이호림 (고려대 / 성소수자가족구성권보장을위한네트워크)

토론: 박수민 (연세대)

이박혜경 (인하대)

김경서 (비혼 퀴어·여성 함께/살기 반달)

페미니스트-비혼운동을 재방문하기 : 비혼 정치의 불/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정현희 (서울대)

이 연구는 한국의 페미니스트-비혼운동을 돌아보며 2000년~2019년까지 20년간의 ‘비혼 정치’를 스케치하고 그 영향력과 의의, 한계를 토대로 ‘오늘의 시점에서 필요한 질문’을 도출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비혼에 관한 기사 분석을 통해 비혼운동의 현장, 담론, 네트워크를 살펴보고, 비혼운동의 의미망을 비가시화하거나 굴절시키는 사회적 논의를 대략적으로 다루었다. 모든 비혼운동의 주체성과 의미를 세밀하게 분석하기보다는 언론의 주목도나 보도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기사’를 분석 자료로 삼음으로써 20년 간의 변화 양상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다. 기사는 총54개 매체로부터 수집된 것인데 이중 29개는 지역종합지였기 때문에 주요 일간지에서는 알 수 없는 대구, 제주 등에서 나타난 움직임과 페미니스트-비혼운동의 행위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5,000여건의 자료를 보다 정밀한 도구를 사용해 분석한다면 그 뒤의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 의미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페미니스트 비혼운동은 여성의 ‘독립’ 이슈로부터 시작하여 호주제 폐지의 흐름과 만나 다양한 가족구성권, 대안적 친밀성 논의로 향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초래될 문제를 다루는 정책적·담론적 장의 구심력으로 인해, 이성애·혈연 중심의 성차별적 가족제도를 개혁하고자 했던 비혼 정치와 대항담론은 공론장에 뚜렷이 드러나고 있지 못하는 시기에 접어들기도 하였다. 비혼 정치는 ‘만혼 현상’을 타개해 저출산을 해결할 미래의 신혼부부, 고령화를 상쇄할 생산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청년층 부양책에 그 자리를 내어주었다. 최근, 페미니즘의 대중화와 4B운동은 페미니스트 맥락의 비혼을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나, 대중매체와 인물(아이콘) 중심의 비혼 담론장의 명암을 보여준다. 물론 이는 이후 어떤 모습으로든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

는 없을 것이다.

비혼 정치에 대하여 ‘오늘의 시점에서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새로이 등장한 비혼 정치는 남성과의 이성애적 관계로부터 정의되는 ‘여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성별정치학에 그 강조점이 있다. 그렇다면 여성·장애인·성소수자·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장소로서의 (원)가족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판,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대응책, 성평등에 기초한 일·가정양립 및 가족친화제도가 여전히 정상가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실은 누가 누구와 함께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비혼/들’의 의미 이론화

유화정 (가족구성권연구소)

‘비혼’여성의 모습은 이제 단일하게 이해되지 않는다. 초기에 가부장제 제도 결혼에 대항하는 여성주의적 운동으로서의 비혼, 결혼vs비혼, 자발vs비자발적 비혼의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의 논의 등 결혼을 중심으로 한 해석은 더 이상 비혼의 다양한 층위를 읽어내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비혼=싱글=비연애’, ‘비혼=불안정=임시적 관계’로 이해되는 단일하고 불완전한 모습의 비혼 역시 현대사회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비혼/들의 모습을 포착하지 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복수형태의 비혼‘들’을 분석하기 위해 비혼여성들이 맺는 친밀한 파트너와의 동거관계에 주목하며, ‘비혼-함께살기-관계성 실천’으로 연결되는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비혼 동거 커플이 섹슈얼리티와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다양한 친밀성·관계성 실천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동거 동성커플의 삶과 동성혼·파트너십 욕구

이호림 (고려대 / 성소수자가족구성권보장을위한네트워크)

본 발표에서는 2019년 가구넷이 수행한 <동거 동성커플 차별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주거, 의료, 직장 등의 영역에서 동거 동성커플이 경험하는 차별과 불이익의 실태와 이들의 동성혼 및 파트너십 제도에 대한 태도 등 주요결과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성혼·파트너십 제도 등 성소수자 가족구성권에 대한 보다 진전된 논의를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짚어본다.

여성 모빌리티와 장소의 재전유

사회: 강인화 (숙명여대)

1. 여성청년 이주민의 주체적 '장소' 만들기
발표: 장민지 (경남대)
2. 대만 여성청년들의 한국 워킹홀리데이
: '워킹'과 '홀리데이'를 넘는 새로운 이동 경험
발표: 이다은 (페미니스트연구웹진 FWD)
3. 대도시 주변부 여성결혼이민자의 이동성과 초국적 어머니-노동자 경험
발표: 위라겸 (전남여성가족재단)

토론: 고민경 (건국대)
조문영 (연세대)
황정미 (서울대)

여성청년 이주민의 주체적 ‘장소’ 만들기

장민지 (경남대)

본 연구는 여성청년들이 국내 이주를 상상하고 이로 인해 이주를 감행함으로써, 여성청년 이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계기들을 미디어 경험적인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이주 전 여성청년들은 자아 발전에 대한 욕망을 미디어 경험을 통해 느끼면서 이주를 감행한다. 여성청년들은 자신의 주체성을 실험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곳으로 ‘서울’을 상상하고 기대한다. 특히 전통적 미디어에서부터 디지털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공간을 상상하게 만드는 다양한 기제들은 여성들의 실질적 이주로 이끈다. 그녀들은 기존의 집에서 ‘혼자만의 방’을 통해 부분적인 독립을 경험한다. 이러한 단편적인 경험은 여성청년들에게 이상적인 주체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불어 넣는 촉매 역할을 하며, 그와 같은 욕망으로부터 여성들은 남성 중심적인 장소로부터 벗어나 이주를 하게 된다.

특히 이 연구는 이주 후 미디어를 통해 장소성을 생산해내며 거주감각을 형성해가고 있는 여성청년 이주민들의 미디어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여성청년 이주민 주체는 미디어 수행성을 통해 다른 누군가와 접속함으로써 홀로 있다는 고립감을 극복하고, 그러한 타자와의 실질적인 연결을 통해 안정감과 친밀감을 획득한다. 그러나 미디어 수행성을 지속할 경우, 미디어를 통한 실질적인 행위 없이도 미디어가 ‘켜져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순간이 발생한다. 미디어를 켜두지만 정작 정보는 받아들이지 않는 행위, 그로 인해 만들어진 불규칙한 소음이나 이미지를 흘려보내는 행위 또한 여성청년들에게 하나의 장소화 경험이며 장소성을 느끼는 방식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서술한 집의 장소성에 대한 젠더 경험은 집이 하나의 정박된 장소성을 가진 물리적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주 전의 집이 여성청년들에게 가부장적 질서 하에 단단하게 정박된 형태의 장소성을 제공했다면(그래서 여

성들은 장소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면), 새로운 집의 장소성은 주체의 일상적 행위나 실천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유동적인 성질의 것(그래서 여성들도 장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집은 주체에 따라 다른 장소성을 갖고, 그 장소성은 획일화될 수 없는 감각의 차원으로 존재한다. 집의 장소성이 하나가 아니라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의 획일화된 집의 장소성에 균열의 감각을 느꼈거나 느끼고 있는 여성들의 경험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다.

‘정주’ 혹은 ‘정박’의 관점에서 서술되던 ‘집’의 장소성은 이주를 경험한 여성청년들이 겪는 크고 작은 물리적 이동과 미디어 경험으로 인하여 ‘유동’과 ‘이동’의 요소를 함께 갖게 된다. 이러한 장소감각은 장소가 단순히 지리적 영역의 수준이 아닌 물리적 실천, 더 나아가 미디어 실천으로도 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만 여성청년들의 한국 워킹홀리데이 : ‘워킹’과 ‘홀리데이’를 넘는 새로운 이동 경험

이다은 (페미니스트연구웹진 FWD)

세계는 점점 전지구화가 심화되며 사람들의 이주가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국경을 넘는 것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일회성이며, 정착을 전제로 한 일방향성 영구 이주(permanent migration)에서 단기 임시 이주(temporary migration)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청년문제와 이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편이 된 청년 해외이주 프로그램의 발달, 한류라는 특수한 동아시아 문화 지형을 가능케 한 온라인 및 미디어 기술의 발달과 전지구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해외의 이미지를 접하면서 외국에서 자신의 삶을 펼칠 수 있다는 상상이 익숙한 지구화 시대의 청년들이 만나면서 대만 여성의 한국 워킹홀리데이라는 특수한 해외이동 현장을 만들고 있다. 그들의 삶에서 동시대 청년들과 비슷한 문제가 드러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대만 사이에서만 가능할 수 있던 특수한 경험(한류 파생 상품을 판매하는 서비스 노동, 대리 구매)을 살펴 보았다. 대만 여성청년들은 “귀신 섬을 탈출해야 하는 난민”이며, 한국에서 외국인 알바생으로, 여행자로, 생산과 소비의 경계를 흐리는 프로슈머가 되기도 하지만 결국 청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회로 돌아온 그들은 “실존적 빈곤”을 다시 겪는다. 겉보기에 화려하게 보이는 지구화 시대 청년들의 해외 이동은 어쩌면 ‘실존적 난민’의 모습은 아닐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대도시 주변부 여성결혼이민자의 이동성과 초국적 어머니-노동자 경험

위라겸 (전남여성가족재단)

이 글에서는 대도시 주변부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결혼 지위 및 어머니노릇이 유급노동 경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주목하여, 이들이 초국적 어머니-노동자로서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통념은,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의 가난한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과 본국 가족 원조를 목적으로 한국 남성과 결혼한다는 것이다. 농촌에 사는 나이 많은 한국인 남성이 결혼중개업체에 돈을 내고 동남아에 가서 단 며칠 만에 나이 어린 외국인 여성을 선택해오는 모습이 아시아 역내 국제결혼의 주된 이미지이며, 이에 대해 ‘매매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 통념 속에서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인 아이를 출산하고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시된다. 여성이 집 밖에서 유급노동을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친정 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 경우 여성이 ‘위장결혼’을 했다는 의심을 받기 쉽다.

그러나 많은 연구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가 오직 경제적인 동기로 국제결혼을 선택했다는 전제와 그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는 전업주부로 살아야 한다는 모순적인 기대는 사실과 다르다. 실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이주 동기 및 과정, 한국 사회 정착, 가족 관계 관리, 유급노동 참여 등에 있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여성결혼이민자의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삶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아직 통념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글로벌 상향혼(hypergamy)’의 잠재적 실패 가능성, 그리고 결혼 이주와 노동이주의 분리 불가능성이라는 그간의 결혼이주 연구를 전제로 유입국 사회

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생활과 유급노동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서로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결혼은 이주의 통로이지만, 동시에 가족 형성과 출산을 통해 (외국인) 아내, 어머니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생애 사건이다. 또한 여성에게 자녀 출산과 양육, 가족구성원 돌봄 등 가족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은 그녀의 노동시장 진출입 등 유급노동 경험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유입국 사회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생활과 가족생활이 유급노동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살펴보는 것은 결혼이주와 노동이주의 상호 얽힘이라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또한 국경을 넘어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여성의 삶을 왜곡 없이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결혼이주의 동기를 경제적 상향 이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여성들이 가족구성원으로서 하는 경제활동을 함께 연구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외국 출신자일 뿐만 아니라 (기혼) 여성이자 정착민으로서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양상을 잘 보여주는 집단으로 대도시 주변부 여성결혼이민자에 주목한다. 이들은 중산층 이상 여성들과 달리 '전업주부'이기를 기대할 수 없으며, 농사 등 생산노동에 무급 가내 노동 형태로 참여하는 농어촌 거주 여성과 달리 가족생활과 병행할 수 있는 집 밖 유급노동에 참여하고 있다. 실제로도 많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하층계급으로서 한국 대도시 주변부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에 관한 연구를 통해 외국인이자 정착민이라는 이 여성들의 특수한 위치, 결혼이민자로서의 위치, 여성으로서의 위치가 유급노동과 가족생활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잘 드러낼 수 있다고 본다.

가족변동과 여성의 일상

사회: 추지현 (서울대)

1. 여성들의 혼인행동 변화와 한국의 젠더혁명
발표: 최선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무엇이 우울한 여성을 더 우울하게 하는가?
: 청년 여성의 가족 내 성역할 규범과 우울의 관계를 중심으로
발표: 류한소·김지민·김경민 (중앙대)
3. 도시 1인 가구의 주거지 결정에 대한 젠더 차이
: 관악구 20-30대 가구의 안정성 욕구와 주거비를 중심으로
발표: 조규원 (서울대)

토론: 정고운 (경희대)
백영경 (제주대)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여성들의 혼인행동 변화와 한국의 젠더혁명

최선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1920년 이후 출생코호트의 혼인행동 패턴과 변화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20세기 후반 여성의 생애과정에서 ‘미혼기’라는 새로운 생애시기가 출현하고 변형되어 온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에서 결혼의 감소경향을 설명함과 동시에, 젠더혁명가설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구변동을 생애과정의 사회적 구성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그 과정에서 여성의 행위성은 배경이나 전제가 되거나, 부수적인 것으로 주변화되지 않고, 적절한 설명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우울한 여성을 더 우울하게 하는가?

: 청년 여성의 가족 내 성역할 규범과 우울의 관계를 중심으로

류한소·김지민·김경민 (중앙대)

이 연구는 만19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에서 가족 내 성역할 규범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그러한 효과가 성별 및 우울증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를 탐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7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들에게 있어 가족 내 성역할 규범에 비동의하는 정도와 우울의 관계는 여성과 남성에게서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 청년의 경우는 전통적 가족 규범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질수록 우울이 감소한 반면, 여성 청년에게서는 유의한 효과를 찾을 수 없었다. 여성 청년에게 있어 가족 내 성역할 규범에 비동의하는 정도와 우울의 관계는 우울증이 있는 여성에게서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우울증이 있는 여성의 경우 지배적인 가족 내 성역할 규범에 반대하는 인식을 가질수록 더욱 우울이 깊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최근 청년 여성들의 악화된 정신건강이 한국사회의 가부장제적 가족 규범과 연관을 가지며 이는 특히 이미 정신건강이 나쁜 상태에 있는 여성에게 더욱 해로운 영향을 갖는다는 논의를 제시하였다.

도시 1인 가구의 주거지 결정에 대한 젠더 차이 : 관악구 20-30대 가구의 안전성 욕구와 주거비를 중심으로

조규원 (서울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여성은 남성보다 모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크게 느낀다. 특히 안전성이 가장 보장받아야 할 주거공간에서 여성은 위협받고 불안감 또한 높게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주거환경에서 안전에 대한 취약성을 느끼는 여성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남성보다 더 높은 주거비용을 지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관악구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15명을 대상으로 1:1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후, 인터뷰 대상자들이 충족시킨 주거 욕구 단계가 성별로 다른지 확인하고 이유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여성은 남성에 비해 낮은 주거 욕구를 실현시키고 있었는데, 이는 안전성에 대한 성별 차이에서 비롯하였다. 여성은 안전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주거비용을 소진하기 때문에 다른 주거환경 요소를 포기하고 있었다. 이는 비슷한 소득이나 연령의 남성 1인 가구와 비교했을 때 여성 1인 가구의 주거 환경 질이 열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시에서 젠더 관점으로 여성 1인 가구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안을 도출할 것을 시사하는 바이다.

변화하는 가족법: 역동하는 가족과 모성 경험

사회: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 친생추정과 '자의 복리'
: 대법원 2019.10.1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발표: 김선화 (수원지방법원)
2. 국가가 보호하는 '모성'의 협소함
: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출산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이은진 (서울대)
3. 재생산권에서 입양의 복잡한 지위
: 입양특례법 논쟁과 한부모가족지원법 헌법소원을 중심으로
발표: 박상은 (충북대)

토론: 오정진 (부산대)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친생추정과 ‘자의 복리’

: 대법원 2019.10.1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¹⁾

김선화 (수원지방법원)

DNA 검사 기법 등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점에 만들어진 친생추정 제도는 생물학적, 혈연적 기준에 의하지 않고 ‘임신 시점’이라는 기준에 따라 여성이 출산한 자녀의 아버지를 ‘추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이는 그렇게 추정된 남자가 그 자녀의 아버지일 개연성이 높을 것이라는 경험칙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부자관계의 경우 ‘추정된’ 혈연이 아닌 ‘증명된’ 혈연관계가 판명될 수 있었기 때문에 모와의 혼인을 기준으로 부자관계를 결정하는 종래의 규율방식에는 필연적으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특히 여성이 제3자 인공수정 방식으로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한 경우, 당해 여성의 배우자에게 태어난 자녀에 대한 법률상 부의 지위를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인지와 관련하여서는 종래부터 여러 논의가 있어 왔다. 본 글에서는 우선 우리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이 기초하고 있는 전제와 제도의 취지를 살펴보고 보조생식기술에 의한 친생자관계 결정기준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나 판결들을 참조하여 친생추정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대상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이 발표문은 2019. 5.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 ‘젠더와 법’ 연수에서 발표한 필자의 글을 기초로 편집, 수정한 것이다.

국가가 보호하는 ‘모성’의 협소함 :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출산 사례를 중심으로

이은진 (서울대)

페미니즘 운동을 통해 낙태죄 처벌 움직임, 가임기 여성 지도 등에 대한 공분이 표출되면서, ‘모성보호’ 개념은 비판받았고 포괄적인 성과 재생산 권리로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환류되었다. ‘모성’은 임신중단 등 다양한 성·재생산 행위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협소한 개념이며, 그조차도 권리라기보다 ‘보호’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 반발하는 측에서는 임신중단권과 모성보호가 충돌하는 것처럼 다루거나 모성보호 조치를 충분하게 제공한다면 낙태죄를 존치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처럼 포괄적 재생산권과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견해가 혼란스럽게 공존하고 있는 때에, 본 연구는 현 시점 모성보호의 문제점을 살피고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2항을 전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포괄적 재생산권 보장과 결을 같이 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들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 및 현행 모성보호조치들에 대해 다각도로 비판했다. 본 연구는 무엇보다 국가가 왜 모성을 보호하여야 하는지, 모성보호의 정당화 논리가 빈약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초기에는 여성 일반이 약자이고, 약자인 이유를 모성에서 찾는 해석론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여성 일반을 잠재적 모성으로 전제하고 강제로 보호하는 한계가 있으며, 개별 법률의 경우 이미 해당 비판을 수용하여 수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모성보호와 성별에 따른 차별 시정 및 성평등 실현과의 관계를 설명할 대안적인 해석론이 제기되지 못한 상태로, 모성보호에 대한 논쟁은 특별보호를 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과 성평등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성별 중립적 접근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측의 대립으로 요약되고 있다. 또 다른 정당화 논리는 임신과 출산이

국가 공동체 존속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가가 모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성에 대한 도구적인 접근법이며, 국가 공동체의 존립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개인이나 집단의 모성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문제가 있다.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에 대한 정당화 논리는 이것이 단지 해석론이 정교화되지 않은 문제라기보다, 현행 모성보호조치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낸다. 임신, 출산 등이 개인의 권리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가의 인구조절 목적에 종속되어, 국가의 목적에 부합하는 협소한 범위의 모성만이 선별적으로 ‘보호’ 명목으로 강제되고, 그 바깥의 성과 재생산은 모성보호 정책에서 논외의 것이 되는 것이다. 단적으로, 미혼모의 경우 ‘모성’이라는 문언 해석에는 포함될 것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의 차원에서 다루어졌을 뿐이며, 혼전 임신의 예방, 입양, 양육 지원에 논의가 집중되어 원치 않는 임신이 출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다루지 못한다.

본 연구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출산 사례에 대한 경험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가가 보호하는 모성 바깥의 출산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으며 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의미화하는지 살폈다. ‘비혼모’, ‘양육미혼모’에 대한 관심은 혼인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출산·양육 의지를 가진 여성들의 존재를 드러냈고, 원치 않는 임신은 혼인 여부나 혼인 내의 임신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용어들과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출산’은 구분된다. 원치 않는 출산으로 인한 출산 사례를 모집하여 위하여 연구자는 서울시 관악구 소재 주사랑공동체 교회를 방문하여 베이비박스를 찾았던 여성 혹은 커플을 연결받았으며, 스노우볼링 기법으로 더 많은 연구 참여자들과 만났다. 1쌍의 커플과 5명의 여성, 총 6개의 인터뷰 자료를 얻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가 베이비박스에 실제로 방문했던 것은 아니지만, 원치 않는 임신을 경험했으며 대체로 임신중단, 입양, 베이비박스 위탁 등을 고려했으나 현재는 직접 양육 중이었다.

분석 결과, 이들이 임신, 출산, 양육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양육곤란의 역설’을 경험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경제적 사정, 미혼, 어린 나이, 파트너나 원가족의 폭력 등은 원치 않는 임신부터 양육까지를 관통하는 일관된 어려움이었으나, 때로는 동일한 조건으로 인해 낱게 되고, 키우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다. 원치 않는 임신이었음에도 결국 직접 양육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오히려 양육곤란

의 사정이 더해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지원책의 효과는 양육곤란의 조건을 해결하기에 미흡하다는 설명으로는 부족한 것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체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었지만, 스스로를 수동적인 피해자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계약들 속에서의 결정과 결정의 번복’으로 자신의 경험을 설명했으며, 임신중단 등을 시도했던 과거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자책이나 후회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신의 결정과 그 결정을 제약했던 법·정책에 대한 의견은 별개의 것으로 사고했다. 대체로 낙태죄, 입양특례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베이비박스도 필요하며, 미혼모 지원책이 다방면으로 부족하다는 견해를 표출했다. 특히 찬성/반대에 국한되지 않는 의견들을 다채롭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존 법과 정책의 한계점에 대해 단지 폐지/유지의 양자택일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했다.

‘모성보호’라는 문언 자체에서 드러나듯,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로는 포괄적인 성과 재생산 권리를 모두 담지 못하는 한계가 노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 시점의 모성보호조치들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드러내면서 모성을 보호한다는 제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에도 부족함을 보였다.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는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중심에 두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것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에 기반하여 헌법 제36조 제2항이 임신가능한 몸을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 임신, 출산, 수유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에 대한 개인의 선택 보장, 임신, 출산, 수유를 하기로 선택했다는 이유로 더 많은 비용을 치르지 않도록 제도 설계를 할 국가의 의무 등을 포괄한다는 해석론을 제안한다.

재생산권에서의 입양의 복잡한 지위

: 입양특례법 논쟁과 한부모가족지원법 헌법소원을 중심으로

박상은 (충북대)

이 글의 문제의식은 낙태가 합법인 미국 등의 일반적인 임신 선택 상담(pregnancy options counseling)에서 낙태(abortion), 입양(adoption), 양육(parenting)의 세 선택지의 편견 없는 제시를 목표로 한다는 사실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이 세 선택지 중 입양의 독특한 위치를 재생산권의 맥락에서 어떻게 사고할 수 있을지가 주요한 고민지점이다.

재생산권에서 입양의 지위는 독특하다. 입양은 한편으로는 산모와 태아에게 모두 위험한 후기 낙태의 대안 선택지이며, 난임 부부나 동성 커플에게 양육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비혼모의 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 부족에 대한 쉬운 해결책으로 기능해 오기도 했다. 입양은 낙태나 양육보다 여러 행위자들이 얽혀있고, 이들의 권리가 부딪히는 복잡한 장이다.

재생산권에서 입양의 지위를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육 비혼모, 입양부모, 입양기관, 입양인, 국가 등 입양을 둘러싼 주요 행위자들이 입양제도를 둘러싸고 어떤 목소리를 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크게 두 법을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면, 첫째, 2011년 전면 개정되어 2012년 발효된 개정 입양특례법(이하 2011년 입양특례법¹⁾)을 둘러싼 논쟁이며, 둘째, 입양기관이 기본생활지원을 하는 비혼모자가족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게 한 2011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4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다.

1) 개정된 해와 발효된 해가 달라 2011년 입양특례법이라고 지칭하는 연구, 2012년 입양특례법이라고 지칭하는 연구 양자가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과 연동하여 이뤄졌다는 것을 환기하기 위해 2011년 입양특례법으로 표기한다.

고령화 · 가족변동 시대, 돌봄의 재구성

사회: 김수정 (동아대)

1. 페미니스트 돌봄 담론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
발표: 전희경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2. 1인가구의 가족돌봄과 자기돌봄: 돌봄 수행과 돌봄 이후의 자립을 중심으로
발표: 지은숙 (서울대)
3. 돌봄의 세대 간 재분배와 젠더관계의 미래
발표: 문현아 (서울대)

토론: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백경흔 (이화여대)

페미니스트 돌봄 담론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

전희경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본 발표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의제인 '돌봄'에 대하여, 페미니스트 담론의 지형을 함께 감각해보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시론적 논의이다. 특히 돌봄에 대한 최근의 '주목'을 분석해야 할 현상으로 보는 데서 출발하여, '돌봄의 사회화'라는 방향성을 점검하고, 그간 돌봄을 주변화된 노동으로 배치하고 착취해 온 가부장적 성별분업체제와 착취적 신자유주의 체제의 변혁에 대한 비전과 연결시킬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1인가구의 가족돌봄과 자기돌봄 : 돌봄 수행과 돌봄 이후의 자립을 중심으로

지은숙 (서울대)

이 연구는 비혼여성 1인 가구를 시민적 돌봄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적 돌봄이란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에서 제안한 개념으로 ‘시민’이라는 차원에서 돌봄의 제공과 수혜의 역동을 정의하고 개인을 둘러싼 돌봄의 그물망을 새롭게 모색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오늘날 한국인들 중 다수는 아프거나 나이든 구성원을 돌보는 일은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생각은 거의 자동적으로 공적 돌봄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옥희살롱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논의를 법제도와 정책에만 맞추면 돌봄의 당사자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국가에 요구하기 외에는 별로 없어진다. 그 결과가 질 높은 돌봄관계의 구축으로 이어진다면 문제없겠지만 코로나 국면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난맥상이 보여주듯 현실은 그리 희망적이지 못하다.

시민적 돌봄 개념을 통해 우리가 자신을 돌봄관계의 당사자 혹은 주체로서 사유하려는 노력은, 기존의 가족, 국가, 시장과 같은 공식적 주체만을 상정할 때 간과하기 쉬운 이웃이나 친지, 지인 간의 비공식적 서로돌봄을 시야에 넣을 수 있다는 이점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개인을 중심에 두고 사회적 돌봄의 그물망과 돌봄관계를 조망할 수 있게 해준다. 아무리 좋은 법제도도 당사자를 대신해서 돌봄관계를 만들어주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점은 강조되어야 한다.

고령화와 개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안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족 외부에서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돌봄관계의 구축이 누구에게나 절실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가족 외부의 돌봄관계를 사유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가족같은 관계나, 대안가족처럼 ‘가족’에 기댈 수밖에 없다. 가족에 기대어, 그것을 넘어서는, 신뢰와 돌봄이 오가는 가족 바깥의 사유가 가능할까? 연구자는 이를 위해 푸코가 헤테로토피아의 사유, 즉 내부의 이질적인 장소, 내부의 외부를 통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새로운 사회질서를 상상한 방식에 주목한다. 비혼여성은 근대의 출발부터 가족 안의 외부 혹은 경계로서 존재해왔다. 비혼여성이 맺는 돌봄관계를 통해 가족 바깥의 돌봄관계들을 우리 삶의 일부로 끌어들이고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에 공적 의미를 부여해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실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비혼여성의 새로운 돌봄관계의 실마리를 발견하고 이것에 이름을 붙이는 작업이 따라주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오랫동안 가족을 넘어선 새로운 연대를 형성해 온 전주의 비혼여성공동체 비비와 그들이 가족안팎에서 실천하고 있는 가족돌봄과 자기돌봄, 서로돌봄에 주목한다. 비비에서 출발해 그들의 경험을 이론화, 보편화하고 이것을 어떻게 친밀한 소그룹 내의 관계가 아니라 시민적 돌봄이라는 열린 관계로 복제하고 확산시킬 것인가를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최종 목적이다. 그러나 아직 이에 관한 충분한 조사와 숙고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탓에 이 글은 아이디어 수준의 논의에 그치고 있음을 밝혀둔다. 이 글에서 활용한 주요 자료는 2017년 하반기부터 연구자가 일년에 몇 차례씩 전주의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이하 공간 비비)을 드나들며 작성한 참여관찰과 온오프라인의 인터뷰기록이다.

이것들을 근거로 먼저 1) 시민적 돌봄이 적어도 무엇은 아닌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 2) 왜 비혼여성 1인가구를 시민적 돌봄의 주체로서 주목하는가에 대해 서술한다. 그리고 3) 비비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가족돌봄, 자기돌봄, 서로돌봄의 현황과 그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돌봄관계가 모색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4) 이러한 접근이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돌봄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사회에 어떤 함의를 지닐 것인가에 대해 짚어보면서 마치고자 한다.

돌봄의 세대 간 재분배와 젠더관계의 미래

문현아 (서울대)

이 글은 돌봄을 누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가족 내 관계를 초점으로 살펴봄으로써 돌봄이라는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가 가족이라는 사안과 어떻게 맞물려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보려고 한다. 특히 이 글에서는 한편으로 남성이 가족 내 돌봄노동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비해 현실은 왜 그 논리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지, 또다른 한편으로 여성은 직장 일을 하면서도 왜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쉽게 직장일을 포기하고 가족 내 노인/아동 돌봄을 맡게 되는지의 배경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한다. 성평등한 돌봄은 과연 가족 내에서 현실 가능한지? 성평등한 돌봄은 세대 관계와 어떻게 교차하는지? 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보기 위함이다.

기술과 재생산, 그리고 생명정치

사회: 이현재 (서울시립대)

1. 인구관리의 생명 권력과 여성의 신체: 정상으로서 '생명'과 낙태죄를 중심으로
발표: 김은주 (서울시립대)
2. 재생산의료 영역에서의 남성: 한국의 보조생식기술과 난임 남성의 비가시화
발표: 김선혜 (이화여대)
3. 인구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다태아 출생의 증가와 신생아 건강 약화
발표: 하정옥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토론: 현남숙 (한성대)
박진희 (동국대)

인구관리의 생명 권력과 여성의 신체 : 정상으로서 ‘생명’과 낙태죄를 중심으로

김은주 (서울시립대)

본고는 입법 개정안이 여전히 기존 법규범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낙태의 권리를 옹호하는 다음의 구절 “미스테리는 낙태가 아니라 생명에 있다”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본고의 관심은 생명권을 강조하며 여성의 선택의 권리를 생명권과 대치시키고 낙태죄 유지를 옹호하는 논리를 넘어서려는 것이다. 낙태죄 유지 논리로 쓰인 생명권 수호가 실은 생명 정의를 독점하며 인구(population)에 관여하는 생명 권력이자 생명 정치로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는 과연 태아의 생명권 인정과 유지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며, 누가 이를 정하는가?라는 문제제기이다.

재생산의료 영역에서의 남성 : 한국의 보조생식기술과 난임 남성의 비가시화

김선혜 (이화여대)

이 글은 보조생식기술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재생산 주체로서의 ‘난임남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출산 장려책의 하나로 2006년부터 시행되어온 난임지원정책들 속에서 오히려 비가시화 되고 있는 구조적 맥락을 논의한다. 난임을 구성하는 원인의 절반은 남성에게 있으며, 남성의 몸 역시 난임 시술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과 출산을 여성의 역할로 여겨온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난임남성은 재생산의료 담론 속에서 부차적이거나 보조적인 위치에 한정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남성 난임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써 어떠한 보조생식기술들이 발전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생식기술의 사용을 둘러싼 사회적, 정책적, 의료적 담론 속에서 남성 주체는 왜 부재함으로서 존재하는지를 분석한다. 보조생식기술과 관련된 국가의 지원기준과 조건들을 분석함으로써, 이 글은 한국의 저출산 위기 담론 아래 난임이 ‘여성의 문제’에서 ‘가족의 문제’로 전환되는 특정한 문화적 변동 속에서 남성 주체가 누락되고 있으며, 남성난임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재생산과 관련한 여성들의 노동이 더욱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밝힌다. 또한 재생산의료 영역에서 난임 남성의 비가시화는 남성 뿐만이 아니라 여성의 재생산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논의한다.

인구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 다태아 출생의 증가와 신생아 건강 약화

하정옥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본 연구는 인구정책과 보조생식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부정적 효과를 밝힌다. 2006년에서 2017년까지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라는 저출산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ART는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017년 10월 “보편적 복지 확대”의 일환으로 보조생식술은 국민건강보험에 포괄되었다. 본 연구는 이렇게 인구정책과 복지 확대의 과정에서 증가한 보조생식술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누구의 권리와 복지를 위한 것인지를 질문한다.

자유주제 세션

사회: 정고운 (경희대)

1. 보육 예산 변화가 2030 여성 유권자의 투표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20대 총선을 중심으로
발표: 이산 (고려대)
2. 불륜 서사에 드러나는 시대성과 가치체계, 섹슈얼리티 연구
: 《위대한 개츠비》와 《붉은 사랑》을 넘어 《부부의 세계》까지
발표: 김혜빈 (이화여대)
3. 중국 부련(婦聯)의 기관지 『중국부녀(中國婦女)』에 나타나는 계획생육(計劃生育)
의 의미: 1950년대 후반의 논의
발표: 장수지 (연세대)

토론: 최선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남이 (서울대)

배은경 (서울대)

보육 예산 변화가 2030 여성 유권자의 투표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20대 총선을 중심으로

이산 (고려대)

본고에서는 ‘20대, 30대 여성 유권자들이 2015년 보육대란 문제에 책임을 묻기 위해 투표에 참여했는가?’라는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우선 ‘보육예산의 변동과 20대 총선에서 20~30대 여성 유권자들의 투표수는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과 2011년도 만 3세~5세 무상 보육 및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의 차이가 커질수록 20대 총선에서 20~30대 여성의 투표수도 증가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고, 이를 일반 회귀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15년도 누리과정이 20대 총선에서의 20~30대 여성 투표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2015년도와 2011년도의 예산 차이 역시 20대 총선 투표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비록 이러한 결과는 연구 질문을 입증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나마 20~30대 여성들이 누리과정 예산의 변화 때문에 20대 총선에 더 많이 참여했을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아울러 몇 가지 분명한 점은 보육 예산과 20~30대 여성 유권자의 투표수는 유의미한 관계를 지닌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보육예산의 차이가 커짐에 따라 투표수도 증가하는 양상이 누리과정 개정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함이 아니었는지,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야당을 뽑는 행위지 않았는지 ‘유추’하는 데 그쳤지만, 전반적으로 보육 정책이 여성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삶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불륜 서사에 드러나는 시대성과 가치체계, 섹슈얼리티 연구
: 《위대한 개츠비》와 《붉은 사랑》을 넘어 《부부의 세계》까지

김혜빈 (이화여대)

본고에서는 불륜 서사가 한 사회의 시대성과 가치체계, 그리고 그 사회가 섹슈얼리티 문제를 다루는 태도를 드러내는 데 유용한 분석의 도구로 기능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이는 두 고전문화작품 - 《위대한 개츠비》와 《붉은 사랑》- 의 비교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그 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부부의 세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오늘 날 한국 사회에서 섹슈얼리티, 특히 가족관계가 논의되는 방식과 그 기저의 시대적 맥락과 가치체계를 드러내는 것이 목표이다.

불륜과 관련한 특정한 소재를 중심으로 당대의 사회상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많이 있었지만 불륜 서사가 가지는 특수성 자체를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여기서는 《위대한 개츠비》와 《붉은 사랑》의 비교분석을 통해 불륜 서사가 중심인물들이 끊임없이 가치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듦으로써 당대의 사회상과 가치체계, 그리고 그것이 남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로 작동한다는 것을 드러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2020년 초에 한국에서 방영돼 큰 인기를 끌었던 TV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분석하여 그 속의 불륜 서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들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알아보았다. 《위대한 개츠비》가 자본의 가치를 강조하고 《붉은 사랑》이 이념의 가치를 강조했던 방식으로 《부부의 세계》는 자식으로 이어진 부부의 연은 쉽게 끊어질 수 없음을, 그리고 그렇게 부모가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메시지와 드라마의 흥행이 의미 있는 이유는 그것이 오늘 날 우리 사회의 시공간적 맥락과 섹슈얼리티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부부의 세계》는 저출산을 중대한 문제로 취급하면서도 가족과 인구구조에 대한 기존의 보수적인 인식체계와 여성에게 그 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에 머물러 있는 한국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논의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성평등과 부부, 그리고 부모가 된다는 것의 무게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더욱 확장되고, 위와 같은 분석 틀을 바탕으로 불륜 서사에 관한 더 많은 사례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중국 부련(婦聯)의 기관지 『중국부녀(中國婦女)』에 나타나는 계획생육(計劃生育)의 의미: 1950년대 후반의 논의

장수지 (연세대)

중국에서 인구정책은 크게 보면 건국기의 인구 증대론과 개혁개방이후 한자녀 정책, 다시 최근의 한자녀 정책의 완화로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체로 국가 입장의 여성정책 및 생산력, 인구에 대한 인식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면서 결혼과 임신, 출산, 양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국가의 노선에 따라 바뀌는 인구정책과 여기에 종속된 여성의 신체적 권리가 기존 연구의 기본적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발표문에서는 이러한 인구정책 속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일방통행적인 정책에 대항하는 담론을 만들어나가고자 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950년대 하반기 잠시 주창된 ‘계획생육’은 일부 지역에서 선전과 교육활동이 있긴 했지만 피임도구의 공급이 부족하였고, 지역적으로 볼 때에도 농촌 각지까지 전파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신중절은 조건이 까다로웠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산아제한 방법이 될 수 없었다. 1950년대 전체적으로 출생률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통해서도 ‘계획생육’은 전사회적으로 보급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약진 운동에 여성들이 대규모로 동원되고 곧 불어 닥친 자연재해와 기근으로 인해 출생률이 낮아졌다. 다만 도시지역이 농촌에 비해 합계출생률이 낮았으나, 극적인 변화는 1979년 이후 한자녀 정책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이 시기, 부련의 기관지에서는 사회적 노동을 해야 했으나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는 아무런 지식도 계획도 없었고, 그저 자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던 여성들에게 성과 재생산에 대한 근대적 지식과 변화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언어화되지 않았으나 여성들의 자결권과 건강권의 입장에서 조혼과 과도한 출산에 반대하는

담론을 생산했다. 각 지역의 구체적인 사업에서 직접 피임을 교육할 수 있는 물질적, 인적 여유는 부족했으나 『중국부녀』는 일정한 독자층에게 여성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전수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여성들이 자녀를 임신하고 낳고 양육하는 전 과정을 온전히 장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편견 없는 이해뿐 아니라 가정 내의 결정권, 경제적 권리, 남성과 평등한 소통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중국부녀』는 각종 생물학적 및 의료적 병리적 약학적 지식을 꾸준히 보급했고, 동시에 평등한 부부관계를 강조하고 가사노동이 사회적으로 기여함이 있음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담론 생산이 당시에는 일부 식자층에 제한되었으나 그 일부에게라도 선택지를 주어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일시적으로 피임법 보급에 좌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공간에서 논의된 경험이 이후 다음 세대의 중국 여성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1960년대에 다시 피임경험에 대한 공유가 여기서 일어나게 된 것이다.